

“월급은 제자리인데”… 세금·보험료는 연평균 6% 상승

한국경제인협회 “근로자 부담 커져”
실수령액 증가세 둔화, 체감소득 후퇴
생계비 상승률 3.9%, 임금상승 추월
전기·가스·식료품 급등에 가계 압박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자 월 임금이 연평균 3.3% 증가하는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합은 연평균 5.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임금 중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다. 근로자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000원에서 2025년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를 보이며 강추위가 찾아온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쳤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가 2020년 13만1626원에서 2025년 20만5138원으로 연평균 9.3% 증가했다. 사회보험료는 5년간 월 31만6630원에서 월 39만579

원으로 연평균 4.3% 상승했다.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5년간 필수생계비 물가의 연평

균 상승률은 3.9%로 같은 기간 근로자 월 임금 상승률인 연 3.3%를 상회했다.

가장 많이 오른 항목은 ▲수도·광열(6.1%)이며 그 뒤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

(2.9%) ▲주거(1.2%)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타연료 및 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 광열비가 임금 보다 두 배 이상 크게 올랐고 ▲사고·굴·떨기 등 과실(8.7%) ▲빵·우유 등 가공식품(5.0%) ▲음식 서비스(4.4%)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4.0%)과 같이 식료품 및 외식 물가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한경협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장바구니 물가 전반에 관한 대책을 바탕으로 근로자 체감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험요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9.5% 지역가입자는 年 18만원 더 낸다

단계적 보험료 인상 로드맵 본격 시행
향후 8년 동안 매년 동일 비율로 확대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부담 격차 커져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0.5%포인트 오른다. 정부가 향후 8년간 매년 0.5%p 수준의 완만한 인상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가입자들에겐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0.5%p 인상된다.

정부는 충격 완화를 위해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0.5%p씩 올리기로 했다. 기존의 9%에서 최종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슬로우 스텝’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게는 ‘0.5’라는 수치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직

장가입자가 아닌 서민들의 경우 부담은 특히 더 불어난다.

우선 직장인의 경우 인상분 0.5%p 중 절반은 재직 중인 회사 부담이다. 이에 본인 부담은 0.25%p 늘어나는 셈이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이면 월 7500원 정도만 더 내면 된다.

반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사정은 다르다. 이들은 오른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직장가입자와 같은 월 300만 원인 경우 1만5000원을 매월 내야 한다. 1년에 18만 원이고 8년 뒤 보험료율이 13%에 이를 시 부담은 그야말로 눈덩이이다.

예외는 있다.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고소득·저소득층 격차 5.78배로 확대

데이터터치,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
지니계수·5분위 배율 모두 악화

지난해 상위 20%(5분위) 고소득층의 소득이 하위 20%(1분위) 저소득층보다 5.78배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분배 지표는 지니계수·빈곤율 모두 악화하며 불평등이 확대됐다. 반면 정부의 재분배 정책 효과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터치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6032만 원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대비 증가, 5분위 역시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향상됐다.

2024년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

위 배율은 5.78배로 1년 전(5.72배)보다 0.06배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상위 20%의 소득 평균이 하위 20%보다 5.78배 많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2016년 이후 2017년(6.96배), 2018년(6.54배), 2019년(6.25배), 2020년(5.75배)까지 개선세를 보이다 2021년(5.83배) 5년 만에 악화됐다. 이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개선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소폭 악화된 것이다.

균등화 시장 소득 5분위 배율도 11.19배로 전년(10.70배)보다 0.49배p 악화됐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에서 사적 이전지출을 뺀 소득을 말한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는 악화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2025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참가 기업(전문가) 모집 안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베트남 전자전기분야 생산기업 현장애로기술지도(TASK)』 사업에 참여하여 현지기업의 생산현장 기술지도 및 기업 간 상호협력 등에 참여할 국내기업(전문가)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기술전문가 모집 개요

사업명: 베트남 전자전기분야 생산기업 현장애로기술지도(TASK)

사업기간

2025년 5월 ~ 2029년 12월 (56개월)

전문가 수행 내용

- 베트남 수요(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애로기술지도 수행
- 참가업체로 선정 시 현지기업 1개 이상 기술지도 담당

모집대상

현지기업을 방문 애로기술지도가 가능한 국내기업(연 3회 이상)

모집기간

상시모집

지원내용

항공/숙식 및 전문가 수당 지원

참가신청 및 문의사항

한국자동차연구원 이준호 책임 (jhlee@katech.re.kr, 031-319-5538)

